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4월

## 멘토링,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 제2기 멘토링 8쌍 결연식 가져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는 제2기 멘토링 결연식을 4월 16일 가졌다.

연구원은 4월 16일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0월 도입, 6개월간 운영한 제1기 멘토링 참여자 간담회와 제2기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4월 13일로 1기 멘토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평가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 2기 멘토링 활동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멘토링 만족도 높아 기간 연장

이날 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1기 멘토링 후임 13명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연구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고, 다양한 지식과 네트워크 전수는 물론 연구에 필요한 부분부터 사생활 상담까지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 1기 멘토링에 참가한 26명의 선임과 후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응과 함께 과반수가 넘는 후

임이 멘토링 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이들이 멘토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

원은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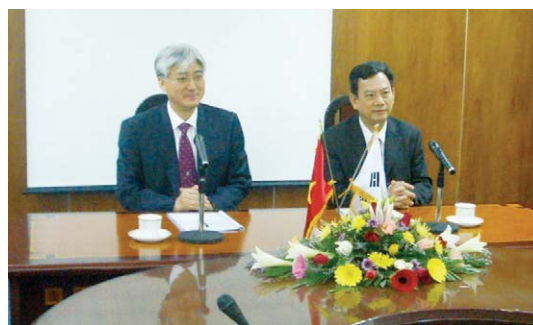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올 3월 입사한 직원을 중심으로 2기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2기 멘토링에 참여한 16명의 결연자들은 앞으로 10월 16일까지 다양한 교류를 가지며 선후배 연구자들 간에 지식전수와 관계형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혁신활동 일환으로 도입한 멘토링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전문가 그룹에서 효과적인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선후배 간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최정섭 원장은 4월 3일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 부장종 소장과 MOU를 체결했다.

최정섭 원장은 4월 3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국립농업계획연구소(NIAPP) 부장종 소장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4월 4일 최정섭 원장은 썬웨이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모델 전파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 개회식에서

축사를 했다. 워크숍은 우리 연구원이 NIAPP 연구진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소속 공무원과 박장성, 푸토성을 비롯한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이날 오

후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를 방문, 차관 및 농촌개발국장 등과 환담했다.

한편 4월 5일과 6일은 우리 연구원이 마을 농촌개발계획 컨설팅을 수행한 광찌성 히엔루옹마을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박장성 호이안마을, 푸토성 주야마을을 방문했다.

##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4월 18일 연구원에서 가졌다.

연구원은 4월 18일 중회의실에서 농업 발전과제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진길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장, 정운천 참다래유통사업단 회장, 김경량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병승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이현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와 원내 연구진이 참여했다.

최정섭 원장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한·EU FTA 협상 등 농업 시장 개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업계와 연구원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률 연구위원이 ‘한·미 FTA 체결과 이후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원이 현장을 기초로 실천적인 연구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승 조합장은 “농산물 가공 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길부 조합장은 후계자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농업인 스스로의 주인 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정운천 회장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 등 참다래 유통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현목 소장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체의 육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일반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

다. 김경량 학장은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북한과 개도국에 대한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미국농업의 과제와 한국농업의 미래’

연구원은 4월 12일 주미 농무관을 지낸 농림부 농업연수원 김재수 원장을 초청

해 ‘미국농업의 과제와 한국농업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원장은 “미국은 농업인구의 감소, 농촌생활의 어려움, 농가소득의 정체, 생산비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농업보조금의 증대와 농업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미국은 품목중심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국제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변화,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농산물 관련 통상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김 원장은 예상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원장은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 농정의 목표와 전략을 재검토하고, 연구기관과 학계는 세밀한 정책개발과 함께 새로운 정책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민단체는 국민의 인식개선에 비중을 뒀서 활동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맞게 농협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채소 중앙자문회의, “양파 가격 하락 대책 세워야”



채소관측팀은 4월 24일 대회의실에서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은 4월 24일 대회의실에서 2007년 제3차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채소 중앙자문회의에는 박병승 대관령 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정준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 회장, 이종빈 무배추 전국협의회 부회장, 박재호 예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정수 대아청과 사장, 조장용 농림부 사무관 등 중앙자문위원 18명과 김명환 농업관측정보센터장, 박기환 채소관측팀장 등 6명의 분야별 담당자들이 참석

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분야별 채소관측 담당자들이 관측결과를 발표했다. 위원들은 양파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일부 품목에 대한 재분석을 제안했다.

한편 축산관측팀은

4월 20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5월호 축산관측월보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영 농협중앙회 양계팀장, 차운모 하림 상무, 최충집 마니커 이사,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팀장 등 8명의 자문위원과 허덕 축산관측팀장, 축산관측팀원들이 참석했다.

5월 축산관측회의에서는 육계의 일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눠 육계 소비, 수입, 향후 전망 등을 관측월보 발간에 반영할 계획이다.



# 농업 · 농촌종합대책 조정의 키워드

박 성 재 선임연구위원

한·미FTA의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DDA 논의의 재개와 함께 우리 농산물 시장의 문턱 낮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예정된 개방 확대 수순에 대응하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비전 아래 2004년부터 1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여건변화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종합대책을 보완·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정의 키워드

농업부문은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효율화하는 한편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경제의 안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 종합대책이 그리는 구도이다.

시장개방의 피해와 벌어지는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과감히 확대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 및 기초 복지 인프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자금을 배분하도록 계획되었다. 투융자 재원의 대부분을 생산·유통 등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 배분했던 과거의 농업구조개선 대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종합대책의 보완·조정에는 정책의 일관성, 미래 경영주체의 육성, 농업성장의 엔진의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본다. 종합대책은 농업, 소득, 농촌정책의 3대 정책분야에 220여 개나 되는 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개별사업이나 시책만 보면 타당해 보여도 다른 정책과 관련지어 보면 서로 상충되어 정책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적합성의 유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자 고령농의 영농지속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어 가는 것이다.

## 정책의 적합성 유지, 진입장벽의 제거

경영규모가 3~5ha인 농가의 2005년도 농업소득을 경영주 연령층에 따라 나누어 보면, 40대 미만인 농가는 42백만원이었는데, 70대 이상인 경우는 13백만원으로 전자의 31%에 불과하였다. 고령이면서도 아직도 대규모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들의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져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경쟁력이 약한 고령농의 영농포기가 바람직해 보이지만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의 생산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농의 영농능력에 맞는 적정규모를 자영하고 다른 농업자원은 젊은 후계자들에게 집중시켜주는 협력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농업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과제였고 그에 대한 정책 지원도 계속해 왔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2000년 농업센서스에서는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비율이 11%이었지만 2005년 센서스에서는 4%로 낮아졌다.

농업의 불투명한 미래,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은 어두운 전망 뒤에 숨어 있는 밝은 빛을 느끼고 찾아가는 현대적 감각의 경영인 이어야 한다.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우수인력이 농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

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각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다. 농업인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급격히 진보하는 기술변화를 따라갈 수는 없다. 시장을 세계로 넓히고, 목표시장을 겨냥한 기술과 상품개발, 시장점유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 성장동력 키우고 소비자 지향적 농정으로

기초 개발, 종자산업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와 투자확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투자확대의 주장만 있지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 추상적인 정책구호가 아닌 세밀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관리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틀이나 체계가 아무리 잘 짜여도 실행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종합대책이 구상대로 작동되려면 우리 사회의 기초 인프라가 더 발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등 관련 경제주체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시장을 먼저 생각하고 생산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종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앞서가는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농가등록제, 식품안전 관리, 환경과 국토관리와 같은 정책이 철저히 실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농정이 되어야 한다.

종합대책은 농산물 시장이 완전개방으로 가는 징검다리적인 정책이고 농업인은 정책전환에 따른 피해 그룹이다. 이에 대한 보상 정책은 당연하고,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R**



# 후계인력 육성과 조직화가 경쟁력

김 병 루 연구위원

FTA, DDA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농업, 적어도 수입확대에 대응해 생존할 수 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농업의 재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주체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금 상태로는 미래가 어둡다.

영세소농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조직화를 통해 규모화, 전문화하여 극복해야 하지만 아직은 품목별 조직화 수준이 매우 낮다. 어느 산업, 어느 분야이건 리더의 선도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체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나, 현재의 조건으로는 리더 양성이 어렵다.

## 농업 리더의 육성과 역할 중요

국제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사람'과 관련한 핵심 방향은 '후계인력 확보', '농업리더·전문경영인(CEO)의 양성'과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이다.

농가인구는 지난 30년간 거의 1/4로 줄어 들어 총인구의 7% 밖에 안된다. 농가구수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고령농가들이 남아 농사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규모화가 더딘 편이다.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975년 8.8%에서 2005년 40.1%로 크게 증가하여 농가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고령농가에 영농승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 중에서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이 1990년 16.4%에서 2000년 10.9%로 감소하고, 심지어 2005년에는 3.6%인 4만 5천 가구에 불과하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들과 결혼해서 농촌에 함께 살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하는 수 없이 동남아 외국여성들과 국

제결혼을 하는 현상까지 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농촌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농업계 학교 졸업생들의 영농정착율이 매우 낮아 농업분야에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연간 10만명 가량이나 되는 농고, 전문대, 농과대학생 중에서 졸업 후 영농에 정착하는 인력은 고작 6.7%인 1,200명에 불과하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신규 귀농가수도 최근 연간 1,200~1,300명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 품목별 조직화로 전문성 강화

우선 생각해 볼 방향은 협동조합의 품목별 조직화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영농조합 중에서 경영, 마케팅, 조직력 등에서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선별적으로 집중·육성하여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농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농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체제로 조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드람양돈조합은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수직적인 계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농가주주 수출기업'인 농산무역은 파프리카를 품목조직화하여 전국 단위의 품목전문 생산자 수출조직으로 성공하고 있다.

영농후계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농고, 농과대 졸업생들은 주로 학력 인수가 관심사로 졸업 후 영농정착율이 매우 낮다. 반면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6년간 의무 영농 조건으로 학비 면제, 기숙사 생활 등 혜택이 주어지고 병역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어 영농정착율이 95%로 매우 높다. 따라서 농고, 농과대 졸업생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한국농업대학 수준으로 유리하게 조정하여 유

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총각 결혼 문제가 심각하니 이에 기혼가정의 귀농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전남 해남군에 있는 참다래 영농법인은 최근 조합원 자녀들의 귀농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자녀 중에서 자녀 2명을 가진 기혼가정들을 선정, 주말이나 휴가철을 이용해 조합원인 부모와 묶어서 교육했다. 그리고 귀농을 한다면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농어촌 특례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효과로 2006년에 시작한 이후 10명이 귀농하였으며 9명이 3~4년 후 귀농을 약속하고, 부모 사후에 귀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농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업 육성 필요

귀농하는 고급인력들의 전문분야 재교육과 정착 지원도 필요하다. 일반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은퇴하여 귀농하는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농업 경영, 기술 분야 등의 재교육으로 농촌, 농업의 리더로 육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수확후관리 분야는 새로운 분야로서 이들 분야에 국가자격증제도를 다양화하여 농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축산에서 '도축사'는 덴마크에서는 장인 직업으로 권위와 인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농업분야의 CEO 교육과 농기업에 대한 지도,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중 교육, 지도, 지원이 이루어지나 농업분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화, 조직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R**



# 위기에 강한 산림 만들어야

석현택 연구위원

최근에 광릉의 잣나무 재선충 발병현장에 다녀왔다. 단 두 그루의 잣나무에 재선충이 감염되어 만 오천 평에 달하는 지역의 70~80년생의 아름드리 잣나무들이 속절없이 잘려져서 톱밥으로 변해 있었다. '잣나무의 살처분이라 할까' 그 현장은 내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 재선충 막을 근본 방제 방안 찾아야

재선충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몇 년 동안 정부의 총력적인 방제작업으로 어느 정도 진압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안전한 줄 알았던 잣나무까지 재선충에 감염되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느낌이다. 지역적으로 경기도까지 침범하면서 전국으로 퍼진 것 같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험벗은 산을 푸르게 하는 데 온 힘을 써 왔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산림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꾸었던 산림이 커다란 위협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재선충으로 인해 위협에 빠진 우리 산림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행히 몇 가지 단기적인 방법이 파악된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를 잘 따라주고,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합쳐지면 재선충병의 진압은 가능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선충병과 같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산림을 복구하는 동안 산림이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재해가 있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우리 나라의 소나무를 전멸시킬 정도로 공격했던 솔잎혹파리는 그 당시 지금의 재선충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솔잎혹파리의 확산 초기에는 방제에 애를 먹었으며 소나무는 전멸될 것 같았다. 실제로 소나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약제가 개발되고 숲이 상대적으로 건 강해지면서 치명적으로 여겨졌던 솔잎혹파리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산불도 만만찮은 적이였다. 몇 차례에 걸쳐 가공할 만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도 한때는 큰 위협이었으나 진화장비의 성능이 향상되고, 진화기술이 발달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인 기상변화도 산림의 은근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서늘이 퍼런 재선충병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재해에 이길 수 있거나 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이 시점에서 절실하다.

##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만들어야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재해가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가에 대한 원인규명이 우선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재해가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게 한 이유는 우리 산림의 취약성에 있다. 즉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데에 있다. 우리 산림이 어떤가? 소나무와 낙엽송, 잣나무 중심의 침엽수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나마 소나무가 23%를 차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는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생태적으로 극성상, 즉 안정적이고 건 강한 숲은 다양한 활엽수종들이 혼재되

어야 한다. 이처럼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은 각종 병해충에 내성이 있고 역학적으로 강하여 산불이나 산사태 등과 같은 물리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해에도 훨씬 강하다.

그렇다고 지금 키우고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베어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새로 심는 나무들은 가능하면 침엽수를 배제하고 더욱이 소나무는 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나무나 잣나무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활엽수 중심의 조림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중장기 조림계획 재검토 조정 필요

작년 조림실적을 보면 침엽수와 활엽수의 조림 비율은 44 대 56으로 침엽수가 많고, 그 중 소나무와 잣나무가 16%와 12%로 여전히 주요 수종으로 식재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산림관리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조림수종의 비율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50대 50 정도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소나무가 여전히 최대 조림수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소나무와 잣나무를 계속 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으로는 우리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소나무가 우리 민족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복지증진, 특별히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소나무 일변도의 조림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국가중장기 조림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

# 인도, 농산물 소비와 생산 간의 격차 확대

김 태 곤 연구위원

세계 곡물수급에 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요인은 소비면에서 두 가지 현저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최근 유가상승과 지구온난화 등의 대안으로 등장한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소위 인구 및 자원 대국인 브릭스(BRICs)의 대폭적인 소비증가를 들 수 있다(본지 2006년 8월호 참조).

후자 중에서 인도의 농산물 생산과 소비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농업은 국토면적의 55%인 1억 6,050만 ha의 농지와 총인구의 70%에 상당하는 농촌인구로서 농업부문 생산액이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쌀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국이며, 태국, 베트남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출국이다. 소맥은 EU27,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이며, 대두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에 이어서 세계 5위의 생산을 차지하는 등 농업대국이다.

## 농업대국이면서 농산물 수급격차 확대

인도는 농산물 소비증가와 생산제한으로 '수급긴박'이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 인구는 2005년 현재 11억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중국과 같은 강력한 산아제한을 실시하지 않았던 관계로 2030년에는 14억 명을 초과, 2050년에 17억 명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소비품목을 보면, 남부 인도는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코코넛 밀크를 많이 먹는다. 중부지역은 쌀과 어패류를 주로 사용한 카레가 주식이며, 닭수어가 기호식품이다. 북부 인도는 빵을 주식으로 하면서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제약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은 정체하고 있다. 소는 전체 인구의 80%에 달하는 힌두교도들에게 신성시 되며, 돼지고기는 힌두교, 이슬람교 양자에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육과 양고기 소비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닭고기는 고 급식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맥도날드와 피자에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물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농업생산을 보면, 갠지스강 유역의 북부와 동부는 쌀과 소맥 등 곡물 산지이며, 서부와 중부는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남부는 곡물과 축산업이 혼재되어 있다. FAO 통계에 의하면, 곡물생산은 2001년 2억 4,300만 톤에서 2004년 2억 3,300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쌀은 주요 수출상품으로서 2001년

630만 톤에서 2006년 430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맥은 같은 기간 300만 톤 수출에서 630만 톤 수입으로 전락하는 등 수급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요인은 단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다수확 품종의 보급 확대로 녹색혁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단수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연평균 단수증가율을 보면 소맥은 1980년 3.7%, 1990년대 2.0%, 2000년대 0.0%로, 그리고 쌀은 같은 기간 3.5%, 1.3%, 마이너스 0.7%로 감소하고 있다. 배경에는 수자원 부족과 토양 산성화 등이 있다. 용배수로, 저수지 등 관개시설 정비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여 물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곡창지대인 편잡주의 경우 관개율은 97%에 달한다. 쌀과 소맥이 전체 수확면적의 80%를 차지하여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 정부는 농산물 생산의 다양화를 통하여 물부족 문제의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었다. 195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 식량자급 달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녹색혁명에 의해 이미 식량자급을 달성하였다.

인도 정부는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쌀, 소맥, 사탕, 식용유 등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정부수매제도'와 '공적분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매입가격을 인상한 결과로 정부 재고가 늘어났고, 이를 수출로 처리함에 따라 대량의 곡물을 수출한 바 있다. 그 이후 매입가격을 인하, 2000년 이후 생산이 정체되고 재고가 감소하여 쌀 수출이 감소하는 동시에, 소맥은 수출국에서 2006년에는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향후 경제성장과 농업정책이 식량수급에 변수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인도는 IT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소득증가의 영향으로 쌀과 소맥의 1인당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총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식량의 총소비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생산은 수자원 부족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세계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대국 인도의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정부수매제도와 공적분배제도 등과 같은 농업정책이 향후 세계 곡물수급에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제 강화

## 한·미 FTA 관련 한우산업대책의 쟁점

한·미 FTA협상에서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쇠고기분야 타결안은 현재 40%인 관세를 15년 동안 폐지하며 이 기간 동안 셰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협상 타결 직후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하여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쇠고기 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한편 미국산 수입은 국산보다 호주산을 대체하여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상등육의 맛과 육질이 한우육에 버금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 있어 한우 수요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논란 가운데 4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으며, 정부는 뼈가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 상자는 통관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내유통이 거의 확실시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축산부문 대책으로 직접지불금 지급, 폐업지원금 지급, 도축세 폐지와 같이 직·간접적인 현금보상 등을 발표하였다.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는 광역단위 우수브랜드 육성, 대도시 직판장이나 전문식당 개설 적극 지원,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확대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단계적 확대와 단속 강화,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이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단발성 현금 보상에 치우칠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축산농가들은 한우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가 한우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수입육과 한우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구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바이오 에너지 육성정책과 파급효과

농림부는 3월 14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으로 500ha 규모의 유채 재배단지 3곳을 선정하여 ha당 170만 원씩 매년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필요성은 최근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60달러까지 상승하고 세계적으로 석유의 가채 연수가 40년 안팎으로 전망되면서 활발해졌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역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붐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를 비롯하여 브라질, 중국 등의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자동차 연료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17년까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현재의 5배 수준인 연간 1300억ℓ씩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브라질, 중국 등도 바이오 에너지 의무사용비율을 높이고 개발 촉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바이오 연료 사용 시 세금 면제,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는 재생 가능성과 환경 부담 경감 외에도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환경보전기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원료 작물인 옥수수 가격의 인상으로 사료가격이 올라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받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 작물 생산 증가로 다른 식량 작물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

## 맞춤형 농정과 농가등록제 도입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통해 농림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범 도입하여 2009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3월 20일 발표하였다.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농가유형을 전업농, 성장가능 중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4개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정책 프로그램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농업인이 자기에 알맞은 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농정이다.

맞춤형 농정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선택적 집중 육성을 위해 전업농과 성장가능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조기은퇴 직접지불 등을 통해 은퇴를 돕고 취미·부업농은 정책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가등록제를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령농이 전체 농가의 30.8%를 차지하고 매년 비율이 급증하는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융자 지원이 전업농과 중소농에 집중되어 고령농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농의 은퇴로 인해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다른 유형의 농가가 고령농의 토지를 인수할 경우 영농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같은 새로운 농업인력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 “혁신과제 논의, 직원화합 도모”

## 부서별 혁신 워크숍 4월 27일, 28일 가저



농촌발전연구센터 등은 제주도 난지농업연구소를 방문해 제주농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부서별 혁신 워크숍을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가졌다.

부서별로 혁신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연구부서와 지원부서가 함께 시간을 가져 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농산업경제연구센터와 산림정책연구실은 속초에서 ‘평생직장으로서의 연구원 만족도 제고’란 주제로 토론했다. 국제농업연구센터와 자료정보지원실, 부원장실은 단양에서 ‘근무환경의 자율화와 업무의 효율성’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농촌발전연구센터와 동향분석실, 기획조정실은 제주도에서 ‘연구성과 확산과 연구부서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했다.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와 행정실, 감사담당은 하동에서 ‘연구부서와 지원부서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원장실과 행정실 시설관리팀은 흑산도에서 연구환경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원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백령도에서 ‘개방화 시대의 농림기술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농촌정보문화센터는 4월 29일과 30일 무안에서 ‘2007년도 센터의 발전방향과 미래지향적 목표설정’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 2007년 정보이용교육 실시

자료정보지원실 자료지원팀은 정보이용교육을 4월 23일과 24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구축한 메타검색시스템과 네트워크작동시스템(NOS)을 통한 원문복사기능에 중점을 두어 교육

했다. 또한 일본어 자동번역 프로그램 설치와 이용방법을 설명하여 일본 학술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전자도서관 이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연구원

은 이번 정보이용교육이 연구자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료실에 설치된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4월 5일 식목행사 가저

연구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나무 심는 것보다 육림에 초점을 뒤서 식목행사를 치렀다. 직원들은 나무에 거름을 주는 등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청소를 하였다.

### 금연프로그램 13명 참여

연구원은 지난해 17명이 참여해 모두 금연에 성공한 금연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 첫 금연 협약식에는 13명의 직원

이 참여해 높은 금연의지를 보였다. 이번 금연 협약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6개월 동안 동대문보건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리를 받는다. 금연프로그램 도입으로 직원들은 건강을 증진하게 되었고, 연구원은 더욱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게 되었다.

### 마사루 교수 객원연구원

일본 사가대학 시나가와 마사루(品川 優)교수가 4월 2일자로 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되었다.

마사루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역활성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과 비교연구를 할 계획이다.

### 연구진 동정

△송미령 연구위원은 4월 9일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최한 금산워크숍에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4월 20일 제주감귤연구센터에서 감귤시범농가들을 대상으로 ‘감귤산업 전망 및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배성 부연구위원은 4월 16일 전북특성화산업단원을 대상으로 ‘국제환경변화와 한국농업’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4월 11일 썬리치레저타운에서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쌀 수급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신용광 부연구위원은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과 정책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 연구원 30년사 자료 및 원고 수집

우리 연구원은 2008년 4월 1일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추억 창고를 열어 보세요.

사진과 육필원고 등 연구원 생활을 기념하며 추억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면 연구원으로 보내 주세요.

30년사 발간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 수집자료: 육필원고, 연구원 관련 서류, 사진, 기념품, 각종 사료

□ 수집원고: 연구원 생활 추억담, 기타 30년사에 꼭 담겨할 원고

□ 담당: 간사 정민국(02-3299-4263), 조태희(02-3299-4226)

\* 자료와 원고를 제공하는 분께는 기념품과 고료를 드립니다.